

북한주민 생활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연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하승희** · 이민규***

본 연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절에 나타난 북한주민들의 생활관련 신문 보도 프레임과 정보원을 분석하여 북한보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1, 2차 프레임 분석에서는 일명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으로 대변되는 4개 신문들의 보도행태가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정권시기별로 분석한 1, 2차 프레임은 신문의 이념과 관계없이 각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정보원 분석에서는 진보지에 비해 보수지가 익명의 정보원을 많이 활용하여 보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가 냉전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생활과 관련해 익명 정보원을 활용한 부정적 논조의 보도는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국내 신문의 보도태도가 전반적인 국내 언론의 북한보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제어: 북한, 북한 주민생활, 프레임

1. 문제제기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지난 67년간 정치이념이 대립된 가운데 불안정한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관련 뉴스는 북한의 폐쇄된 정치 체제로 공산당의 일방적인 발표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중심의 거시적인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고 한민족 삶의 공동체를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주민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뉴스는 매우 적거나 그 내용도 근거 없는 소문일 경우가 많다(김수민, 2008).

이에 따라 북한이나 통일 관련 국내언론 보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시적 차원에서 단일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에서도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와 이를 수용하는 수용자 그리고 대북보도 시스템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어왔다.

이 같은 기존 북한보도 연구 주제의 편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정치·군사·경제의 거대 사안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북한 주민과 관련된 생활보도¹⁾를 국내 언론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도하는지 대북정책 성격이 상이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걸쳐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을 언론보도 프레임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단순 프레임 분석뿐만 아니라 ‘뉴스원’이라는 정보원 분석을 통해서 다면적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국내언론매체의 보도내용과 성향을 탐색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본 연구는 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nature1091@naver.com),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1) ‘북한주민 생활보도’의 정의는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북한주민을 언급한 경우를 말한다. 내용적으로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북한주민들의 실제모습에 대한 보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에 대한 보도를 의미한다.

2. 이론적 배경

북한은 3대 세습과 고립된 정치 체제로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많은 탈북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 기준 국내 탈북자 수는 21,404명에 달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이들 탈북자들의 주요 탈북 동기는 ‘생활고’로 밝혀졌다. 하지만 북한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북한 사회 내부의 열악한 생활 실태에 대한 실상은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고 있다. 북한사회의 폐쇄적인 체제 속에서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는 탈북자나 북한내부에서 전하는 소식을 인용한 대북매체들을 통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관련 정보 또한 간접취재로 얻은 정보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은 특정 기관의 정보나 정보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정보원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장수근, 1994).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을 분석한 한동섭의 연구에서는 익명 정보원은 기사 작성과 이데올로기적 성향, 신문사 입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언론은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성향에 따른 편향성을 드러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한동섭, 2008). 이러한 결과는 북한 보도에서 사용되는 익명 정보원이 자칫 북한에 대한 불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행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왜곡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신문의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 프레임과 주된 정보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올바른 북한보도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북한보도의 특수성

(1) 정권에 따른 대북정책과 언론보도 양상

남한의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기초 또한 변화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북 경제회복지원,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 정상회담 등의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김근식, 2002).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이어받아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내려 하였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이명박 정부는 윈-윈(Win-Win)을 목표로 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역학관계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는 사회적 공익 실현 목적을 바탕으로 상호 협조와 견제가 이루어 질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1972년 유신정권 이후 군사정부가 사회전반에 권력을 행사하면서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였다. 이로 인해 언론은 정부의 강경한 반공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가운데 언론은 이념적인 편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를 보도했다(유재천, 1990).

그러나 1987년 이후 우리사회의 급속한 민주화와 함께 언론의 개방이 진행되면서 강경하고 맹목적인 반공주의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보도 프레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취재과정에서 제외되던 운동권

인사들도 합법적 취재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한겨레신문의 등장은 북한 사안에 대한 새로운 보도 프레임 지평을 열어 주었다(윤영철, 1991).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동률은 정권의 권력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 종속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에선 탈피하였지만 이념의 양극화 현상과 자사의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김동률, 2009). 정치권력과 언론보도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관계가 강제적 유착관계에서 자발적 이익교환으로 변모하였을 뿐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유착이라는 속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고영신, 2007). 이진영·박재영(2010)은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보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제와 취재원이 다양해졌지만 이념의 다양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1970년대와 비교해서 한국의 언론은 주체성 회복과 자발적 권리 행사만 변화하였을 뿐, 여전히 정치권력과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지고 논조 또한 일관되었음이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의 자발적 철회에 따른 수동적 획득이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박승관·장경섭, 2001).

(2) 북한 보도의 성향과 보도제약 요인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이념적 대립과 적대적인 체제를 유지하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허은, 2011). 남과 북의 언론 또한 자본주의 언론과 사회주의 언론이라는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다. 동서로 분단되었던 독일의 통일과정에는 언론이 크게 작용했다. 1973년 ‘방송 개방 선언’에 따라 동서독 방송화면 통일의 실현으로, 동독 국민의 85%는 서독의 공영방송인 ARD와 ZDF를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이 독일 통합의 큰 초석이 되었다(김성완, 1996). 이처럼 언론의 역할은 통일과 같은 사회통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남북간 언론교류는 단절되었고, 남한 내 북한관련 보도에 있어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보도 또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나타나는 남한 언론의 북한관련 보도의 문제점은 편향성과 선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박용규, 1998). 남한 언론의 편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부정적 묘사,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 고착화, 북한사회의 회화화, 북한 실상 왜곡, 체제 우위적 권위주의와 같은 점이 나타난다(박용규, 1998). 또한 선정적 측면에서는 북한 실상에 대한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경향, 지엽적 사안에 대한 가십성 보도, 오보, 추측보도, 왜곡보도, 미확인 보도, 확대 보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등이 지적되었다(김영옥·김택환, 2000).

북한 관련 보도는 특파원 파견 등 직접취재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매체, 탈북자, 방북 민간인, 국내·외 정보기관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한 보도는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보도가 아니므로 ‘~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전해졌다’ 등의 피동형 간접인용문과 익명으로 처리한 기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김지영, 2011). 북한관련 보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부정할 근거도 없다. 또한 기사에 대해 북한이 고소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기자들이 안이한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런 의식은 관행처럼 남아 오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창룡(1994)은 오보의 발생 배경에 대해 한정된 정보원 사용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언론정책과 언론내부의 해당 분야 전문가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외부와의 접촉 단절로 새로운 여론 형성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먼저 외부적 상황의 제약 요인으로 정보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관련 보도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쟁 준비 설, 김정일 건강 악화 설 등으로 많은 혼란을 빚었으며, 최근에는 김정일 사망 원인을 두고 내부 쿠데타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폐쇄적인 북한의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북한보도에 대해 보도원칙을 무시하는 보도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김수민, 2008).

북한 보도에 어려움을 겪는 언론사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정부의 언론통제와 정보독점, 언론사간 과열경쟁과 상업주의에 입각한 보도, 북한뉴스에 대한 언론사의 무관심과 언론인의 비전문성 등을 꼽을 수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91). 정재철(2009)은 정부 및 보수단체와 북한 간의 강경한 대결구도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북한보도 생산자인 기자가 보도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 정서, 특정사건이 유발시킨 정세,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보수 언론의 대북관 등으로 인해 북한뉴스에 대한 가치판단에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언론연구원, 1991).

2) 북한보도 관련 뉴스 프레임 연구

(1) 뉴스 프레임 이론

프레임은 뉴스내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하나의 시각이 부여된 틀로 보고 있다(이준웅, 2000). 프레임 연구의 목적으로 강내원(2002)은 객관적인 현실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는지, 이러한 재현은 어느 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뉴스 보도에 대한 프레임 이론은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현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수용자는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 이론을 활용해 언론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조망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수정·정연구, 2010). 이준웅은 기존 프레임 연구의 방향을 사회적 상호작용 접근, 텍스트 분석적 접근, 사회 운동론적 접근, 예상 이론적 접근, 메시지 효과론적 접근과 같이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준웅, 2000).

하지만 프레임 이론은 다양한 의미와 용어사용 속에서 뉴스 내용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원용·이동훈(2005)은 프레임 이론에서 비체계성과 산만성이라는 비판을 보완하기 위해 보편적 프레임 형식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1950년대 이후 국내 원자력관련 보도를 프레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정황프레임, 귀인 프레임, 배경 프레임, 가치 프레임과 같은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유형화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1950년대 이후 원자력 보도를 분석한 결과, 보편적 프레임 형식에서 유형화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후속연구에서 프레임 연구의 이론적 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념의 정교화와 다양한 주제 적용을 제안했다. 이와 같이 프레임 이론은 뉴스내용의 특성을 명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하나의 시각이 부여된 틀로 보고 있다.

이상의 뉴스 프레임 이론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면,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이며 이것이 수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를 토대로 프레임 이론은 뉴스 보도에 있어서 수용자에게 특정 부분을 부각시키거나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유도되는 구성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북한보도 관련 프레임 선행연구

언론학 분야에서 북한보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크게 보도 프레임 연구(강태완, 1997; 곽정래·이준웅, 2009; 김경희·노기영, 2011; 박기순·전리령, 1995; 심훈, 2005; 이구현, 2004; 이우승·영선, 2006; 이원섭, 2006), 보도 생산자 연구(정재철, 2009), 수용자 인식 연구(이준웅, 2004)로 나눌 수 있다.

북한보도 프레임 연구로는 주로 핵 관련 이슈,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나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 핵 관련 보도를 분석한 연구(이구현, 2004)에서는 미국 중심의 외신에 의존하는 경향과 핵 문제로 인한 남한의 위기에 대해 확대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 기아보도를 분석한 프레임 연구(심훈, 2005)에서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은 북한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인색했던 반면, 정부 소식통과 대북정책의 강경한 목소리는 기사 전면에 배치하면서 정치적·이념적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 한 것으로 분석했다.

매체의 이념에 따라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주요 신문에 나타난 북한이미지 연구(박기순·전리령, 1995)에서 북한사회상은 심한 통제, 폐쇄적 사회, 충성을 강조하는 경직된 사회로 묘사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경희·노기영(2011)의 연구에서는 진보신문에 비해 보수신문이 ‘적대국’, ‘비합리적’,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정보원 활용 측면에서는 보수신문이 탈북자와 북한주민을, 진보신문은 미국의 정부 관리 및 언론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매체는 자사의 이념에 맞는 정보원을 선택하여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권 시기에 따라 보도프레임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이우승·영선(2006)은 방송보도에서 북한주민 생활상 관련 소재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열등한 이미지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에 긍정적인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건이 갖는 이슈에 따라 언론의 보도태도 또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 문제 관련 사설을 분석한 곽정래·이준웅(2009)의 연구에서는 탈북자 문제가 남북문제만이 아닌 국제외교와 인권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언론보도는 국제 외교와 인도적 차원에서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고 언론사와 정부 시기별에서는 주요 프레임에 차이를 보였다.

북한 보도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북한 체제와 정권에 초점을 맞춰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보도태도를 보였고, 폐쇄적인 사회로 북한을 묘사하고 있었으며, 정보원은 주로 탈북자와 북한주민, 미국 언론과 같은 외신보도와 정부 관료를 많이 인용하였다. 이러한 정보원의 활용은 각 언론사의 이념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으며 국가, 정부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맹목적인 외신인용 행태 또는 정부 관료에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권 비교 분석에서는 각 정권에 따라 보도태도에 차이가 났으나, 북한 생활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부정적 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정보원에 대한 분석

정보원(source)이란 뉴스생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정보원은 “말했다”, “주장했다” 등과 같은 화자를 나타내는 말과 연결될 때 알 수 있다. 실명 정보원이란 사람 또는 기관의 이름을 명시한 경우를 말하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익명의 정보원으로 간주한다.

한동섭(2008)은 언론보도가 묘사하는 현실에서 정보원의 강한 영향력을 주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원은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와 미국의 주요 신문을 대상으로 인용과 취재원 적시에 대해 분석한 박재영·이완수(2007)의 연구결과 빈도에 대해선 차이가 없었으나 익명화자의 의견성 직접인용구, 직접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무(無)주체 수동체 문장, 제목의 직접인용구 빈도가 국내신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신문이 인용과 취재원 적시의 절차적 규범을 잘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과동형과 익명정보원의 사용은 저널리즘 글쓰기의 포맷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개인 글쓰기의 잘못된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지영(2011)은 익명의 특징을 모호성으로 특정 짓고 이것은 책임성이 부족해지고 특정 부분이나 의견을 일반화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또한 익명사용의 습관화는 취재원 발언 내용을 기자 마음대로 과장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 보도의 정보원 관련 연구로는 방송 뉴스의 외신인용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배성인의 연구에서는 방송 3사 모두 외신 보도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미국 중심의 단순전달식 보도행태가 나타났고 맹목적인 외신인용 보도로 인해 오보가 나타났음을 밝혔다(배성인, 2006). 설진아(2007)는 6자회담 관련 방송보도에서 정보원과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방송 3사 모두 각국의 정부 관료에 의존하며, 정보원의 논조는 방송뉴스의 보도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보도에 있어서 익명 정보원의 사용은 독자가 보도 내용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왜곡된 선입견을 갖게 하며 남북한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익명 기사는 정보원이 사실을 조작하거나 기자가 기사를 조작할 여지가 있다. 조작된 기사가 아니더라도 독자들에게는 기사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스 신뢰도를 손상시킨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앞에서 언급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국내 신문에서 나타나는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양적 특성은 신문사별·정부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프레임은 신문사별·정부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에서 정보원은 신문사별·정부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분석 단위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국내 주요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선정하였다. 이 신문들은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인 진보지와 보수지로 많이 활용되어왔다. 백선기(1997)의 연구에서는 조선일보를 대표적인 보수신문으로, 한겨레신문은 진보주의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치 이념적으로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남북관계에서는 반공주의, 반 주체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겨레신문은 진보를 표방하고, 남북관계에서는 점진적 통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경희·노기영(2011) 또한 정치이념과 경제이념에 있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보수 성향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진보 성향을 가지는 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 의미나 분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주요매체에 대한 이념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성향이 강한 매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진보성향이 강한 매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신문에 보도된 개별 기사의 전체 지면이다. 북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사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안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북한 주민과 관련된 생활보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연관이 되어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단어를 두 문장 내에서 언급한 경우, 키워드가 주된 내용이 아닌 경우, 글자 수 500자 미만의 단신기사와 사진기사, 관련된 내용이 전체 지면의 20%이하일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분석 시기 및 분석 범위

연구의 분석 시기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설정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 25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25일부터 현재 시점인 2011년 10월 14일까지로 분석시기를 선정했다.

신문의 기사 검색은 한국 언론재단의 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인 카인즈(kinds)를 사용하였다. 카인즈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조선일보에 한해서는 조선일보 홈페이지 내 PDF 검색을 사용했다. 분석 시기에 맞춰 ‘북한 주민’으로 1차 검색한 결과, 조선일보 2,186건, 동아일보 2,208건, 한겨레신문 1,051건, 경향신문 1,935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북한주민 생활보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2차 기사를 추출한 결과, 조선일보 155건, 동아일보 125건, 한겨레신문 36건, 경향신문 44건 총 360건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기사는 모두 360건이다.

(3) 분석유목 및 정의

분석은 기사 유형, 기사 논조, 정보원의 유형, 1차 프레임과 2차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차 프레임과 2차 프레임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다(최선욱·유홍식, 2010). 먼저 기사의 논조는 긍정·중립·부정으로 나누어 각 신문사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분석하였다²⁾. 정보원의 유형

2) 기사 내용에서 나타나는 글의 투를 분석하는 것으로 긍정은 바람직하거나 옳다고 지지하는 내용, 북한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경우를, 중립은 단순사실 전달, 양비론을, 부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은 실명 정보원(실명 또는 직책, 기관명 거론)과 익명정보원(가명, 필명, 소식통 또는 관계자 등으로 통용되는 익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이슈에 대해 다양한 프레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여 세밀한 프레임을 추출하고자 하였다(강내원, 2002). 정보원 분석에서는 1차적으로 비슷한 정보원끼리 묶는 작업을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실명과 익명의 정보원을 합하여 총 21개의 정보원을 도출하였다.

(4) 프레임 특성

먼저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주제진술문을 작성한 다음 비슷한 주제진술문을 모아 프레임을 구축했다. 코더 간 합의를 거쳐 도출된 1차 프레임 유형은 총 4개이며, 1차 프레임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2차 프레임을 구축한 결과 총 7개의 2차 프레임이 도출되었다. 자세한 프레임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체제 프레임

가.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 북한의 독재체제, 체제 강화, 주민통제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억압받는 내용이 담긴 프레임을 말한다. 통제의 목적으로 공포정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포함된다. ‘북 피의처형 늘었다’ 등의 기사가 포함된다.

나. 주민 반발 프레임: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내부 혼란 또는 동요가 확산되는 프레임이다. ‘주민들, 이젠 김정일 이름 막 부르더라’, ‘북 주민 체제불만 노골 토로’ 등의 기사가 해당된다.

② 북한 개방 프레임

가. 서구화·선진화 프레임: 남한,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방송·물자·체제 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담긴 기사 프레임을 말한다. ‘남한 드라마 열풍’ 등 북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 서구화 관련 내용이 이 범주에 속한다.

나. 체제·정권 선전수단 프레임: 서구화·선진화 프레임과 맥락은 같으나, 변화하는 주체가 북한 당국에 맞춰진 경우를 말한다. ‘김 주석 생일 맞아 주민에 콜라 팝송’, ‘북 주민 더 배고프게 만드는 평양 햄버거 가게’ 등의 기사가 이에 해당된다.

③ 반사회적 범죄·일탈 프레임

가. 퇴폐적·비도덕성 프레임: 선정적이고 비도덕적, 비합리적인 행위, 퇴폐적인 내용의 기사를 말한다. 불륜 부부를 뜻하는 ‘8.3 부부’, ‘북 시장서 日 음란물 불티’, ‘히로뽕에 찌든 북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나. 반인륜적 범죄 프레임: 반인륜적 범죄행위 등을 보도한 기사를 말한다. ‘경악스러운 북 생체실험 보도’, ‘인육순대 사건 목격 탈북자 북 참상 증언’,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와 같은 내용이 해당된다.

④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

가.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프레임: 식량난, 의약품·생필품 부족 등으로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비상선포 발령에 관한 내용의 프레임을 말한다. ‘굶주린 꽃제비 다시 늘어났다’, ‘북, 마취 없이 다리절단-맹장수술’ 등의 내용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표 1>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프레임 유형

1차 프레임	2차 프레임	주요 진술 단어
북한 체제	체제에 의한 억압	화폐개혁, 주민통제, 공개처형, 총살, 수용소
	주민 반발	저항, 체제불만, 내부 동요, 정권비난, 민심 흉흉
북한 개방	서구화·선진화	휴대전화, 남한 드라마, 남한 말, 성탄절, 미드
	체제·정권 선전수단	남한가요 해금, 과시, 선전, 아파트촌, 국가 홍보
반사회적 범죄·일탈	퇴폐적·비도덕성	음란물, 마약, 히로뽕, 범죄조직, 윤락여관, 밀거래
	반인륜적 범죄	연쇄살인범, 인육순대, 생체실험, 인신매매
북한주민 삶의 질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식량난, 아사자, 꽃제비, 보릿고개, 고난의 행군

(5) 분석방법 및 코더 간 신뢰도

분석 방법에서 보도의 양적특징과 1, 2차 프레임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고, 정보원의 분석은 이분형 중복응답분석을 사용하였다. 코딩은 한 명의 연구자와 해당분야의 현업 신문기자이자 신문방송학 박사과정의 다른 한 명의 코더가 함께 시행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오랜 기간 토의와 합의를 통해 코더훈련과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전체 기사의 약 11.1%에 해당하는 40건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코딩의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은 코헨 카파(Cohen's Kappa) 산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측정결과, 1차 프레임이 .993, 2차 프레임이 .870으로 높게 나타났다. 1·2차 프레임을 합산한 코더 간 신뢰도 또한 .918로 높게 나타났다.

4. 연구결과

1)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양적 특징 분석결과

(1)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보도량 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양적 특성에서 나타난 국내 신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사별, 정부시기별 양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360건의 기사 중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155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시기별로는 이명박 정권이 166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기사유형은 스트레이트기사가 219건(60.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사 논조는 부정적인 기사가 264건(73.3%)으로 많이 나타났다.

신문사별 보도 빈도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전체의 77.8%를 차지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진보지에 비해 보수지가 북한주민 생활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정부시기별 보도량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100건(27.8%), 94건(26.1%)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166건(46.1%)으로 이전 두 정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많은 보도건수를 보이고 있다. 기사 유형에서는 스트레이트가 219건(60.8%)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획/특집/해설 유형은 97건(26.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사 논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264건(73.3%)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2)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결과

(1)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프레임 유형 분석결과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신문사별·정부시기별로 나타나는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프레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프레임 유형 중 1차 프레임에서는 북한체제 프레임이 129건(35.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이 106건(29.4%), 북한 개방 프레임이 95건(26.4%), 반사회적 범죄·일탈 프레임이 30건(8.3%) 순으로 나타났다. 1차 프레임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북한 체제 프레임은 2차 프레임인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과 주민반발프레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북한주민 생활에 있어서 북한체제와 관련된 프레임을 말한다. 1차 분석 결과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에서는 북한 체제와 관련된 보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차 프레임에서는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프레임이 106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이 92건(25.6%)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였고, 서구화·선진화 프레임이 77건(21.4%), 주민반발 프레임이 38건(10.6%), 반인륜적 범죄 프레임이 21건(5.8%), 퇴폐적·비도덕성 프레임이 9건(2.5%), 체제·정권 선전수단 프레임이 17건(4.7%) 순으로 나타났다.

(2)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신문사별 프레임 분석결과

<표 2> 신문사별 1차 프레임 분석

		신문사명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1차 프레임	북한체제	71 (45.8%)	45 (36.0%)	7 (19.4%)	6 (13.6%)
	북한개방	39 (25.2%)	34 (27.2%)	7 (19.4%)	15 (34.1%)
	반사회적 범죄·일탈	12 (7.7%)	12 (9.6%)	3 (8.3%)	3 (6.8%)
	북한주민 삶의 질	33 (21.3%)	34 (27.2%)	19 (52.8%)	20 (45.5%)
전체		155 (100.0%)	125 (100.0%)	36 (100.0%)	44 (100.0%)

$\chi^2=29.446$, $df=9$, $**p < .01$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신문사별로 나타나는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사에 따른 1차 프레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선일보는 71건(45.8%), 동아일보는 45건(36.0%)으로 두 신문 모두 북한체제 프레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 19건(52.8%)과 경향신문 20건(45.5%)으로

진보성향인 두 신문 모두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으로 대변되는 각 신문들의 보도가 각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신문사별 1차 프레임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chi^2=29.446, df=9, p < .01$).

<표 3> 신문사별 2차 프레임 분석

		신문사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2차 프레임	체제에 의한 억압	48 (31.0%)	36 (28.8%)	6 (16.7%)	2 (4.5%)
	주민 반발	24 (15.5%)	9 (7.2%)	1 (2.8%)	4 (9.1%)
	서구화·선진화	33 (21.3%)	28 (22.4%)	4 (11.1%)	12 (27.3%)
	체제·정권 선전수단	5 (3.2%)	6 (4.8%)	3 (8.3%)	3 (6.8%)
	퇴폐적·비도덕성	3 (1.9%)	3 (2.4%)	1 (2.8%)	2 (4.5%)
	반인륜적 범죄	9 (5.8%)	9 (7.2%)	2 (5.6%)	1 (2.3%)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33 (21.3%)	34 (27.2%)	19 (52.8%)	20 (45.5%)
전체		155(100%)	125 (100%)	36 (100%)	44 (100%)

$\chi^2=39.260, df=18, **p < .01$

신문사별 2차 프레임 분석 결과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이 조선일보 48건(31.0%), 동아일보 36건(28.8%)으로 두 매체 모두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 (19건, 52.8%)와 경향신문 (20건, 45.5%)은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프레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차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진보신문과 보수신문 사이의 보도 프레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9.260, df=18, p < .01$).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프레임에서 가장 많은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은 북한당국의 독재체제 또는 체제강화로 인해 주민들이 억압을 받고 고통에 시달리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북한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프레임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된 보도들은 주민들의 고통을 부각시키며 북한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프레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프레임’은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등으로 인해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비상선포 발령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과 고통 받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신문사별 프레임 유형의 결과분석을 정리하면 보수성향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억압받는 주민생활 ‘북한체제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진보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것은 각 신문사의 성향에 맞게 특정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체제 프레임’과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프레임’을 사용한 보도들은 대체적으로 폄박받는 주민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들을 북한 체제의 희생자로 묘사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3)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정부별 프레임 분석결과

<표 4> 정부별 1차 프레임 분석

		정부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1차 프레임	북한체제	29 (29.0%)	18 (19.1%)	82 (49.4%)
	북한개방	19 (19.0%)	36 (38.3%)	40 (24.1%)
	반사회적 범죄·일탈	5 (5.0%)	18 (19.1%)	7 (4.2%)
	북한주민 삶의 질	47 (47.0%)	22 (23.4%)	37 (22.3%)
전체		100 (100.0%)	94 (100.0%)	166 (100.0%)

$\chi^2=57.002$, $df=6$, $***p < .001$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정부별로 나타나는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부시기에 따른 1차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시기에서는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이 47건(47.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시기에서는 북한개방 프레임이 36건(38.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북한체제 프레임이 82건(4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chi^2=57.002$, $df=6$, $p < .001$). 이것은 북한 주민생활 프레임이 각 정부시기별로 특정 프레임을 부각하여 보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정부별 2차 프레임 분석

		정부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2차 프레임	체제에 의한 억압	24 (24.0%)	14 (14.9%)	54 (32.5%)
	주민 반발	6 (6.0%)	4 (4.3%)	28 (16.9%)
	서구화·선진화	11 (11.0%)	33 (35.1%)	33 (19.9%)
	체제·정권 선전수단	7 (7.0%)	3 (3.2%)	7 (4.2%)
	퇴폐적·비도덕성	1 (1.0%)	5 (5.3%)	3 (1.8%)
	반인륜적 범죄	4 (4.0%)	13 (13.8%)	4 (2.4%)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47 (47.0%)	22 (23.4%)	37 (22.3%)
	전체	100 (100.0%)	94 (100.0%)	166 (100.0%)

$\chi^2=67.291$, $df=12$, $***p < .001$

각 정부 시기에 따른 프레임유형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1차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2차 프레임에서도 각 정부별로 특정 프레임이 부각된 것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프레임이 47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서구화·선진화 프레임이 33건(35.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이 54건(32.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67.291$, $df=12$, $p < .001$).

3)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정보원 분석결과

(1)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정보원 유형 분석결과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신문사별·정부시기별로 나타나는 정보원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정보원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정보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언론이 93건(1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식통 85건(11.3%), 익명 탈북자 74건(9.9%),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 63건(8.4%), 대북전문매체 53건(7.1%) 순이었다. 정보원의 유형은 크게 실명 정보원과 익명정보원,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명 정보원은 전체 중 57.5%를 차지하였고, 익명 정보원은 40.2%를 차지하였으며, 기타는 2.2%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정보원은 ‘소식통’이었다. ‘대북 소식통’, ‘내부 소식통’ 등 많은 기사에서 소식통을 정보원으로 인용하고 있었다. ‘소식통(11.3%)’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국내외 언론(12.4%)’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실명정보원과 비교했을 때도 익명의 정보원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세 번째로 많은 빈도를 나타낸 정보원도 익명의 정보원인 ‘익명 탈북자(9.9%)’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경험담 또는 사실 확인, 소문 및 사건의 진위여부나 최근 소식들에 대한 의견 등이 ‘익명 탈북자’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이었다.

네 번째는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8.4%)’로 나타났다.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중국을 통해 북한주민들과 접선하거나 방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전하거나 인권개선 또는 인도적 지원 촉구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대북전문매체(7.1%)’로 나타났다. 대북전문매체 또한 인권구호단체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북매체들은 북한 내에 정보원을 두고 있어 내부 소식을 전하는 연결망이 구축되어있다고 한다(김홍수, 2011. 01. 25).

정보원의 유형 분석을 종합해보면 전체 비중에서는 57.5%로 실명정보원의 비중이 더 높다. 하지만 40.2%를 차지한 익명정보원은 실명정보원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 생활과 관련된 보도에서 익명정보원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신문사별 정보원 분석결과

<표 6> 신문사별 정보원 분석

		신문사명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실명 정보원	국내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18 (5%)	14 (6%)	6 (8%)	7 (8%)
	해외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7 (2%)	7 (3%)	1 (1%)	1 (1%)
	북한당국 및 북한언론	21 (6%)	13 (5%)	5 (6%)	4 (4%)
	유엔산하기관	11 (3%)	16 (6%)	11 (14%)	14 (16%)
	연구기관 및 전문가	15 (5%)	17 (7%)	7 (9%)	5 (6%)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	25 (8%)	23 (9%)	10 (13%)	5 (6%)
	국내외 언론	29 (9%)	35 (14%)	9 (12%)	20 (22%)

실명 정보원	대북전문매체	23 (7%)	21 (8%)	3 (4%)	6 (7%)
	국내외 일반인	5 (2%)	0 (0%)	2 (3%)	0 (0%)
	실명 북한주민	2 (1%)	5 (2%)	0 (0%)	0 (0%)
	실명 탈북자	5 (2%)	2 (1%)	2 (3%)	0 (0%)
익명 정보원	익명 국내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20 (6%)	13 (5%)	7 (9%)	3 (3%)
	익명 해외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3 (1%)	2 (1%)	0 (0%)	2 (2%)
	익명 연구기관 및 전문가	3 (1%)	6 (2%)	1 (1%)	1 (1%)
	익명 인권 구호단체 및 관계자	5 (2%)	1 (0%)	2 (3%)	1 (1%)
	익명 국내외 일반인	16 (5%)	10 (4%)	2 (3%)	2 (2%)
	소식통	43 (13%)	31 (12%)	5 (6%)	6 (7%)
	익명 북한주민	22 (7%)	16 (6%)	1 (1%)	4 (4%)
	익명 탈북자	51 (15%)	15 (6%)	3 (4%)	5 (6%)
기타	기타	2 (1%)	0 (0%)	0 (0%)	3 (3%)
	없음	6 (2%)	5 (2%)	0 (0%)	0 (0%)
합계		332 (100%)	252 (100%)	77 (100%)	89 (100%)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신문사별로 나타나는 정보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사별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익명탈북자가 51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소식통이 43건(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는 국내외 언론이 35건(1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소식통이 31건(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겨레는 유엔 산하기관이 11건(14%)으로 가장 많은 정보원의 빈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가 10건(13%)을 차지했다. 경향신문은 국내외 언론이 20건(22%)으로 가장 많았고, 유엔 산하기관이 14건(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각 매체별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정보원 중 익명의 정보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여 보도한 신문사는 조선일보가 유일했다. 동아일보 또한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한 정보원이 익명 정보원인 ‘소식통(12%)’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국내외 언론(14%)’과 비교했을 때 근소한 차이로, 동아일보에서 ‘소식통’을 인용한 익명의 정보원 활용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진보지로 대변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정보원이 모두 실명 정보원이었다. 한겨레는 유엔 산하기관과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가 각각 11건(14%), 10건(13%)을 차지했다. 경향신문은 국내외 언론이 20건(22%)으로 가장 많았고, 유엔 산하기관이 14건(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국내외언론 정보원을 보았을 때 국내 정보원 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경향신문 또한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정보원인 유엔 산하기관을 프레임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 정부시기별 정보원 분석결과

<표 7> 정부시기별 정보원 분석

		정부시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실명 정보원	국내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10 (6%)	12 (7%)	23 (6%)
	해외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4 (2%)	7 (4%)	5 (1%)
	북한당국 및 북한언론	11 (6%)	12 (7%)	20 (5%)
	유엔산하기관	26 (15%)	9 (5%)	17 (4%)
	연구기관 및 전문가	8 (5%)	9 (5%)	27 (7%)
	인권구호단체 및 관계자	11 (6%)	12 (7%)	40 (10%)
	국내외 언론	35 (20%)	26 (15%)	32 (8%)
	대북전문매체	0 (0%)	7 (4%)	46 (11%)
	국내외 일반인	2 (1%)	4 (2%)	1 (0%)
	실명 북한주민	3 (2%)	3 (2%)	1 (0%)
	실명 탈북자	3 (2%)	1 (1%)	5 (1%)
익명 정보원	익명 국내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9 (5%)	10 (6%)	24 (6%)
	익명 해외정부기관 및 정부관계자	3 (2%)	2 (1%)	2 (0%)
	익명 연구기관 및 전문가	1 (1%)	4 (2%)	6 (1%)
	익명 인권 구호단체 및 관계자	4 (2%)	2 (1%)	3 (1%)
	익명 국내외 일반인	11 (6%)	6 (3%)	13 (3%)
	소식통	6 (3%)	12 (7%)	67 (17%)
	익명 북한주민	12 (7%)	13 (8%)	18 (4%)
	익명 탈북자	13 (7%)	18 (10%)	43 (11%)
기타	기타	0 (0%)	2 (1%)	3 (1%)
	없음	4 (2%)	2 (1%)	5 (1%)
합계		176 (100%)	173 (100%)	401 (100%)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북한 주민 생활 관련 보도프레임에서 정부별로 나타나는 정보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시기에 따른 정보원의 활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국내외 언론’이 35건(20%), ‘유엔 산하기관’이 26건(15%) 순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외 언론’이 26건(15%)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익명 탈북자’가 18건(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소식통’이 67건(17%), ‘대북 전문매체’가 46건(11%)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국내외언론’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외신을 정보원으로 인용한 기사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소식통’이 가장 많은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정보원에서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유엔 산하기관’, 노무현 정부는 ‘익명 탈북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 전문매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5. 결론

북한은 폐쇄적 성향으로 사회 내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남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치·사회·군사 문제와 같은 거시적인 이슈는 북한의 공식매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사회 내부동향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던 북한관련 국내언론 보도에서는 거시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영역인 북한주민 생활에 대해 다루면서 단일시점이 아닌 장기적인 변화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또한 진보·보수신문의 다양한 프레임과 정보원 분석으로 심층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함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매체의 북한 주민 생활보도에 나타난 프레임과 정보원을 분석하여, 올바른 북한 보도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에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양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가장 많았고, 정권시기별로는 이명박 정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사유형은 스트레이트기사, 기사 논조는 부정적인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매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도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김정아·채백, 2008). 박기순·전리령(1995)의 연구에서는 한겨레신문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보도를 거의 게재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보수성향의 신문에 비해 진보성향의 신문의 보도량이 뚜렷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체의 이념에 따라 보도량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각 신문사의 북한관련 네트워크 정보력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 탈북자 출신 기자가 북한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북한출신인 만큼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하므로 따로 자신의 경험담을 기사소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겨레는 한겨레평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술사업의 성격이 강해 북한 보도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비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북한보도 빈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신문사별 1·2차 프레임 분석 결과 보수성향의 신문은 ‘북한체제 프레임’과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을 사용하며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판하였고, 진보성향의 신문은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과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프레임’을 사용하여 북한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권시기별 1·2차 프레임 분석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북한주민 삶의 질 프레임’과 ‘식량난·의약품·생필품 부족 프레임’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개방 프레임’과 ‘서구화·선진화 프레임’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체제프레임’과 ‘체제에 의한 억압 프레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원섭(2006)의 연구 또한 정부정책 평가관련 보도에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보도 편차가 드러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거시적인 정부정책 뿐만이 아닌 미시적인 북한 주민관련 보도에서도 각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보도편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각 신문사별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정보원 가운데 익명의 정보원을 가장 많이 활용한 매체는 조선일보였다. 동아일보 또한 가장 많이 인용한 국내의 언론의 비율과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한 소식통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익명의 정보원 활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진보성격의 신문사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다 빈도와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한 정보원들이 모두 실명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 성향의 신문이 익명 정보원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정권시기별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국내외 언론’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익명 정보원인 ‘소식통’을 가장 많은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보도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국내 북한주민 생활과 관련된 보도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먼저 진보와 보수 신문성향에 따라 북한보도가 다르게 프레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신문의 경우 실명 정보원을 사용하여 북한주민을 인도적 지원차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수신문의 경우 익명의 정보원을 사용하여 북한주민이 체제에 의해 억압을 받는 프레임에 부각시켰다. 특히,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생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보도량과 높은 익명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우승·영선(2006)의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언론이 정부에 우호적인 대북보도와 북한에 대한 반공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보도에서 정보원의 익명처리는 정보원의 제약과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보원들의 시각에서 정보를 포장하거나 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익명의 정보원에 의존한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익명 정보원은 독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의 현 상황에 대해 쉽게 예측하고 판단하는 추측성 보도와 가십성 기사 또한 자제해야 한다. 이는 자칫 남북 사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가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제사회의 대처 또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성급한 예측을 하기보다 정부나 관계 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정확한 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원 접근성의 한계는 기존연구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왔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 기자들의 교류 확대와 같은 남북 환경의 관계개선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우호적인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과의 냉전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한 관계 개선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정확한 보도를 위한 북한보도에 있어서 보도준칙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신문사들은 북한 전문부서와 신문사 차원의 통일관련 연구소를 운영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으로서 전문분야와 연계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하고 이는 보도 시스템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한다. 단순히 외부기고가의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계, 북한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심층적인 해석과 강도 높은 분석기사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 관련 연구소 활성화와 더불어 취재보도 준칙마련과 이에 따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 신문사 가운데는 북한출신 기자를 채용하여 북한 관련보도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보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출신 기자를 채용하되 그들의 경험에만 의존해 쓰는 기사는 자제해야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도 생산자인 언론인의 취재윤리 강화이다. 고질적인 북한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추측성 보도, 감정에 호소해 본질을 흐리는 보도와 같은 구태의연한 관습을 버리지 않으면 북한보도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익명정보원 활용 또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언론인들의 습관성 익명표현에 대한 관습 또한 언론사 취재 윤리 준칙강화를 통해 개선되 나가야 한다.

객관적인 보도란 추측성이 아닌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현상에 대한 나열이 아닌 사실의 진위여부를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언론이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을 대할 때 북한의 실체가 뚜렷해 질 것이고, 국민과 정부의 북한관도 명확해 질 것이다. 또한 향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언론의 교두보를 통해 평화적 남북관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거시적 이슈중심의 북한보도 분석에서 벗어나 미시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상이 주요 일간신문에서 어떠한 프레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남긴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의 기사추출과정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대표성을 갖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주민 생활관련 보도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기사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개념적 정의와 기사추출과정에서 코더간의 합의를 거쳤음에도 주관적 견해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둘째, 프레임 유형의 구축에 있어 유용한 분석 프레임을 제시하는 데에 탐색적 연구에 그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슈나 쟁점이 아닌 북한보도의 주민들의 생활모습에 대해 프레임을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주제 분류에 머물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의 생활보도 프레임에 대한 결과가 신문에 성격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었고,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주요 신문사와 세 정부에 걸친 보도행태의 차이점, 익명 정보원 분석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기에 탐색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석대상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신문에 대한 내용분석에 그쳤다는 점이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분석방법에 있어 더욱 폭넓은 매체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Ⅰ 참고문헌

- 강내원 (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5~44.
- 강태완 (1997). 북한문제에 관한 텔레비전과 신문의 보도관행비교연구.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 23권, 85~107.
- 고영신 (2007).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1호, 156~196.
- 곽정래 · 이준웅 (2009). 김대중 · 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조선일보』 · 『한겨레』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196~217.
- 김경희 · 노기영 (2011). 한국 신문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361~387.
- 김근식 (200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2호, 95~119.
- 김동률 (2009). 언론의 정치권력화. 『한국언론정보학보』, 45권, 296~340.
- 김성완 (1996). 남북통일의 전망과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정신전력연구』, 19권 2호, 57~94.
- 김수민 (2008).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평화학연구』, 9권 3호, 5~25.
- 김수정 · 정연구 (2010). 프레임 분석에 있어서 무보도 현상의 적용 효과 연구: 미디어법에 대한 현재판결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82~404.
- 김영욱 · 김택환 (2000). 『남북문제 보도의 새로운 모색: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함께』,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원용 · 이동훈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

보』, 49권 6호.

- 김정아·채백 (2008). 언론의 정치 성향과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41호, 232~267.
- 김지영 (2011). 『피동형 기자들』. 서울: 효형출판.
- 김창룡 (1994).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 서울: 나남출판.
- 박기순·전리령 (1995). 『한국 신문에 반영된 북한 이미지』. 서울: 소화.
- 박승관·장경섭 (2001). 『언론권력과 의제동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용규 (1998). 한국 언론의 북한보도 현황과 통일 지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회보』, 19권, 183~204.
- 박재영·이완수 (2007).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韓美)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 배성인 (2006). 북핵 문제 관련 방송 3사 저녁뉴스의 외신인용 보도실태. 『북한연구』, 9권, 51~61.
- 백선기 (1997). 우리 언론의 남·북 관련 사안 보도태도의 문제점. 『저널리즘비평』, 21권, 40~41.
- 설진아 (2007). <6자 회담>에 관한 텔레비전 외교뉴스의 정보원분석. 『한국방송학보』, 21권 4호, 69~100.
- 심훈 (2005). 1995년 북한 기아에 대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분석. 『한국언론학보』, 48권 1호, 57~83.
- 유재천 (1990). 남북한의 통일언론정책. 『언론문화연구』, 8권, 47~89.
- 윤영철 (1991). 언론의 현실 재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6호, 251~286.
- 이구현 (2004). 북한의 핵 관련 국내 주요 신문보도에 관한 계량적 분석. 『출판잡지연구』, 12권 1호, 102~116.
- 이우승·영선 (2006). 국내방송의 북한관련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보』, 10권 1호, 28~56.
- 이원섭 (2006).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 평가. 『한국언론정보학보』, 35호, 329~361.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호, 85~152.
- 이준웅 (2004). 언론 매체 이용 및 해석 틀이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8권 1호, 28~56.
- 이진영·박재영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다양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301~325.
- 장수근 (1994). 북한관련보도의 매커니즘 분석: 정보원의 폐쇄성으로 남발되는 추측성 오보. 『저널리즘비평』, 14호, 17~22.
- 정재철 (2009). 남한 방송의 북한 보도 생산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8호, 135~152.
- 최선옥·유홍식 (2010).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뉴스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2권, 69~89.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한국언론연구원 (1991). 『남북통일과언론』.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한동섭 (2008).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702~739.
- 허은 (2011). 냉전시대 남북 분단국가의 문화정체성 모색과 '냉전 민족'. 『한국사학보』, 43호, 209~243.
- 김홍수 (2011.01.25). 북한 취재에 목숨 건 '비밀 기자들'. 『조선일보』, [On-line],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25/2011012500102.html

(투고일자: 2012. 2. 29, 수정일자: 2012. 4. 30, 게재확정일자: 2012. 5. 4)

ABSTRACT

A News Frame Analysis by the South Korean Press on the Livelihoods of a North Koreans

Seung-Hee Ha* · Min-Kyu Lee**

Analysis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Chosen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Newspaper’ on news reporting frame and sourc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population’s living and status of their respective conditions throughout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of Kim Dae-jung, Roh Mu-hyuen, and Lee Myung-Bak. Resulting first and second frame analyses showed that the four newspapers showed clear distinctions in their execution and attitude in their reports in accordance to the philosophies of each ‘progressive/left-wing newspapers’ and ‘conservative/right-wing newspapers’. Moreover, the first and second analyses showed that the reports mimicked each individual presidential administration and their political policy regardless of the newspaper’s political voice. In terms of the usage of ‘anonymous sources,’ conservative newspapers were found to use them more frequently than their counterpart, the liberal newspapers. In conclusion to the overall analyses, with the continued tens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 the reports of North Korean inhabitant activities are inevitably portrayed in a negative tone in effort to plant a distorted view to the South Korean citizens. Furthermore, this manipulation of the press may affect the credibility of South Korean press in terms of the topic of North Korean culture.

Keywords: North Korea Reporting, Lives of North Koreans, Frame Analysis

* Graduate Student Div.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Div.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